

■ 국내동향

通産部, 輸入先 多邊化 품목 일부 해제

통상산업부는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 등 25개 품목을 '96년도 해제대상 품목으로 지정,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의 전기드릴 등 일부품목은 부분해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품목은 현재 187개에서 162개로 줄어들게 된다.

통산부는 이번 해제대상품목 선정과 관련, ▲장기간 지정돼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거나 ▲현재 국내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 ▲일본으로부터 예외수입이 많거나 ▲국내시장 규모가 작아 해제시, 대일수입 증가가 미미한 품목 등 지정 실효성이 작은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 수입선 다변화 개정내용

〈완전 해제 대상품목(전기관련)〉

H	S	품 목 명
8544	20 0000	동축케이블과 기타의 동축도체
	60 3090	전압 100kV 초과외 기타 전선(다만, Bus Duct는 제외)

〈부분해제 대상품목(전기관련)〉

H	S	현 행	개 정
8508	10 0000	각종의 전기드릴(착암기 제외)	각종의 전기드릴(착암기 및 함마드릴 제외)

■ 국산개발 대상품목 및 부품수입 추천기관

추 천 기 관	국 산 개 발 대 상 품 목	
	H S	품 목 명
한국전기공업진흥회	8502	압축점화식의 발전세트
	8504	무정전 전원장치, 전동기 속도제어장치
	8508	수지식 전동공구
	8516	전기밥솥
	8536	전자개폐기

通産部, '96년 자본재산업 7조원 지원계획 확정

정부는 '96년중 자본재 산업육성을 위해 외화대출 자금 2조 4천억원 등 총 7조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또 국산 기계류·부품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 수도권에 제2국제종합전시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산업부는 「제3회 자본재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6년 자본재산업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통산부는 지난해 자본재산업부문에 연불수출지원자금, 산업기술개발자금 등 모두 3조 9천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96년중엔 지원규모를 7조 6백억원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주요 부문별로는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자금 3조 4천 2백억원 △기

계류할부금융 5천억원 △사업기술개발자금 2천억원 △工高중설 등 기술교육지원 1천 5백억원 등이다. 통산부는 또 기계류·부품의 대형 국제전시회를 적극 개최하기 위해 수도권에 제2국제종합전시장을 설립키로 하고 경기도와 부지선정 등을 협의중이다. 이와 함께 3월까지 국산화 대상품목을 발굴, 고시하는 한편 에어백 등 50개 품목을 선정해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기술인력 지원을 위해선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의 자격을 현행 석사 이상에서 학사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 2010년까지 發電所 122基 건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모두 46조 5천억원을 투자해 122기, 5,700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을 제외한 석탄화력·LNG복합화력·양수발전소의 신규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민자를 유치해 건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체에너지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경제성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전원 구성이 되도록 LNG화력발전의 구성비를 확대하고 석탄화력은 하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2010년에는 수요관리전 최대 전력 수요는 7,085만kW, 2006년에는 6101만kW에 달하는 수요억제와 효율향상 등 수요관리를 감안할 경우 2010년 6,564만kW, 2006년에는 5,772만k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2010년 100 전기공업

까지 46조 5천억원을 투입해 원자력 19기 1,930만kW, 석탄화력 29기 1,550만kW, 석유화력 5기 126만kW, LNG화력 40기 1,744만kW, 수력 및 기타 29기 350만kW 등 모두 122기 5,700만kW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중 원자력은 설비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석탄화력 80만kW급은 사업의 효율성과 신규격상 설비임을 감안해 민자발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석탄 50만kW급, LNG복합 45만kW급 및 양수 25만kW급은 전력사업의 경쟁체제 도입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건설 물량의 약 50% 수준을 민자로 건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01년 이후 2010년까지 민자 3조 7,747억원을 유치, 석탄화력 2기, LNG복합 11기, 양수 2기 등 모두 15기의 민자발전소를 건설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인 LNG화력의 설비구성비를 '93년 계획시의 17.6%에서 27.7%로 대폭 늘리고 석탄화력은 29.8%에서 27.3%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석탄신발전방식(CCT)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활용하기 위해 2005년에 30만kW급의 석탄신발전방식 건설을 추진하고 2003년에는 5천kW급 대체전원(풍력·태양광 등)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부품·소재 共用化 지원 강화

부품·소재 공용화를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공용화 규격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구매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인증획득,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에서 우대조치를 부여한다.

이번 지원시책은 부품·소재의 공용화에 따른 설계변경, 시작품 제작 및 공용화제품 생산을 위한 신규설비투자 등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도 이에 대한 업계의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관련업계 및 단체의 의견을 반영, 통상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원시책을 공용화규격 개발단계, 공용화 추진단계, 공용화 완료단계, 공용화제품 구매단계 등 4단계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규격개발 단계에서는 표준규격 개발 소요비용의 70%까지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에서 지원한다.

공용화 추진단계에서는 공용화규격을 제품설계 등에 반영하고자 할 때 설계변경 및 시작품 제작비용은 산업기술자금에서, 제품생산을 위한 신규설비투자비용은 중소기업자동화자금 및 지방중소

기업육성자금에서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또 완료단계에서는 공용화제품 생산에 성공한 업체가 여타 제품개발을 추진할 때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기술자금에서, 여타 제품의 자동화·정보화 등의 설비투자를 할 때는 중소기업자동화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서 추가지원한다.

또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가 뒤따른다. 이와 함께 공용화제품 또는 공용화제품을 사용한 완성품은 정부기관에서 우선구매하고 관련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을 면제해 주는 한편 KS·EM 등 각종 인증획득시에도 우선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부품·소재 공용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품·소재 공용화사업을 자본재표준화사업으로 일원화해 일관성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품목소관 생산자단체를 공용화 추진단체로 지정해 공용화 추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케 할 계획이다.

■ 공용화 추진 관련 지원 사항

구 분	지 원 대 상	지 원 대 상
규격화추진단계	○ 표준화 사업비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자금
공용화추진단계	○ 설계변경 및 시작품 제작 ○ 치공구·금형 및 설비투자	○ 산업기술자금 ○ 중소기업자동화자금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공용화완료단계	○ 여타 제품 개발 ○ 여타 제품 설비투자 ○ 기타	○ 산업기술자금 ○ 중소기업자동화자금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 기간산업체 지정 ○ 우선구매 ○ 검사·형식승인 면제 ○ 인증획득 ○ 포상
구 매 단 계	○ 공용화제품 및 공용화제품을 사용한 완성품	○ 외화대출자금

通産部, '96년도 團體隨契 289품목 지정

통상산업부는 금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으로 작년보다 25개 줄어든 289개를,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71개를 각각 지정했다.

단체수의계약 물품의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한 충전장치 등 4개 품목과 추천기준 미달 및 동일 세번내 통폐합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24개 품목 등 28개 물품이 제외됐으나 3개 물품이 신규지정돼 전체적으로 25개 물품이 줄어들게 됐다.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의 경우 전력공급장치 등 6개 물품을 제외하고 충전장치 계장제어반 등 6개

물품을 신규지정해 물품수에서는 변동이 없다.

한편 통산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KS, ISO 9000, 단체표준 등 품질향상 노력과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업체가 능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96년도 단체수의계약지정물품(전기공업 분야)

정부물품 분류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물 품 명
5930-095	31201109	개폐기, 절연수동 및 자동(가공설치용의 것으로 SF6 가스 개폐기에 한함)
5975-021	28114109	클램프(전기용에 한함)
6110-011	31203101	배전반(전기조절장비)
6110-014	31203109	
6110-022	31109109	전압조정기(AVR에 한함)
6110-063	31109109	무정전전원장치
6110-070	31102101	변압기
6120-010	31102109	
6120-013		
6115-053	31101109	발전기, 디젤엔진(1,000kW 이하에 한하며, 해상용 및 방음형은 제외)
6130-039	31109102	정류기, 부동용

■ '96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전기공업 분야)

정부물품 분류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물 품 명
5925-022	31201109	차단기, 누전
6110-011	31203101	배전반(154KV, 345KV용 보호 배전반에 한함)
6110-025	31201309	계장제어반(수처리설비에 한하며, 수요처발주 예산액이 '96. 1. 1~6. 30까지는 25억원 이하, '96. 7. 1~12. 31까지는 20억원 이하에 한함)
6120-001	31102104	리액터(분로용 제외)
6130-027	31109100	충전장치(충전기)

中企廳, '96년도 資本財 표준화 사업계획 수립

중소기업청은 올해 자동차와이퍼모터 등 모두 50개 과제에 대한 자본재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개발된 표준규격들에 대해서는 KS 또는 단체규격으로 제정하고 정부 우선구매제도 등과 연계시켜 규격제품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자본재산업의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고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자본재표준화 사업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중기청은 이 사업계획에서 올해가 자본재표준화 5개년 계획의 원년임을 감안, 표준화 추진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개발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성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과제 중 50%는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간 부품공용화 과제를 우선개발키로 했다.

이번에 개발될 표준규격들은 품목의 특성에 따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 또는 단체표준으로 제정해 관리된다. 특히 규격제품의 활용촉진을 위해 정부조달 물품이거나 사용자보호와 안전관련 품목들은 KS규격으로 개발해 정부 우선구매제도

와 연계, 규격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단체표준은 대기업과 생산자단체를 통해 표준품이 우선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용화를 추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작품 제작, 금형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공용화 완료업체에 대해서는 여타제품의 개발과 자동화·정보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지원토록 하고 병역특례업체로 지정하는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되는 자본재표준화사업을 과제별로 보면, 우선 기술이 안정되고 수급상 계열관계가 있는 부품·소재에 대한 규격의 통일·단순화를 통해 타기업군간 혹은 경쟁업체간 규격의 공동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와이퍼모터 등 25개 과제를 공용화과제로 개발키로 했다.

通産部, 中古品 수입 대폭 自由化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허용되던 중고품 수입이 '96년부터 대폭 자유화된다. 통상산업부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고품 수입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네거티브리스트에는 국민보건·위생·산업안전 및 환경 등 국제기준이 규제하고 있는 230개 품목이 선정됐는데 이 중 기계류 등 161개 품목은 해운항만청 등 관련부처나 업종단체

가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경우 추천을 통해 수입이 가능하지만 차량 및 차량부분품 가운데 69개 품목은 종전처럼 수입이 금지된다.

통산부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중고품도 신품처럼 수출입공고·통합공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수입 절차에 따라 들여올 수 있으며 네가티브리스트에 더해 수출입별도 공고가 정하는 요건을 추가로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 업종별 수입규제 대상품목(전기관련 품목)

업종별	대상품목	추천기관
전기기기	노와 오븐, 금속의 저항용접기 4개 품목	한국전기공업진흥회

中企廳, 기술혁신형 中企 50개 육성

중소기업청은 올해부터 매년 성장잠재력을 지닌 성장유망중소기업 50개를 선정, 종합적인 지도·지원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공업기술원과 업종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지도기관의 전문가 등 60명의 진단팀을 투입, 기업의 경영·기술·제품상의 제반 문제점을 종합진단해 50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키로 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기술·제품상의 취약점 진단, 취약점 개선을 위한 지도, 기술인력 교육, 기술정보 제공, 자금자원 추천, 우수중소기업 추천, 우선구매 추천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지도비용 2억 5천만원을 정부예산에서 전액 지원하고 병역특례업체로 지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통산부·구매기관·금융기관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21세기 중소기업의 모델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그동안 각종 지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취약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시 및 정기적인 점검체제를 도입해 수행능력이 부족한 업체와 지도실적이 부진한 지도요원에 대해서는 지도사업에서 제외하고 지도성과에 대한 업체별 제3자 종합평가제를 도입해 지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원대상기업의 매출액 및 생산성이 각각 1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通産部, 국내외 退職기술자 300명 확보 계획

통상산업부는 기계류, 전기·전자 등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약 300명의 국내외 퇴역기술자를 확보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석·박사급 우수두뇌로서 군입대 대신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전문연구 요원 중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비중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급 기술 인력난 완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퇴역기술자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주도로 상반기중에 기술지도단을 구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기술 및 경영지

도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국내기술자로 구성되나 일부는 일본 해외무역개발협회(JODC)에 등록된 기술자와 일본 北九州지역 기업체의 퇴역기술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연간 3천명 정도가 산업체에 배정되고 있고 이 중 약 13%만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배치되고 있으나 이를 30% 수준까지 늘릴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과학기술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현재 中企부설연구소 가운데 석·박사급 이상의 연구원이 3명 이상 있는 연구소에만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토록 하는 규정이 중소기업에 대한 우수두뇌 배정을 가로막고 있는 점을 감안, 석사 학위 소지자 1명과 학사급 2명 이상만 있을 경우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제한조건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